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입법절차 ‘스타트’

충남대전·대구경북통합법과 함께 행안위 상정  
9일 공청회·10~11일 소위 심사· 12일 의결 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입법 절차 첫 발을 내디뎠다.

행안위(위원장 신정훈)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비롯한 182개의 법안의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외에도 광역행정 통합을 다루는 특별법안으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광방송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충남대전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등이 이날 함께 행안위에 상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한병도 원내대표 대표발의)으로 발의됐고, 대구경북행정특별법안을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

의 했다.

기본소득당 오회인 의원은 이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 상정되고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며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우려를 덜기 위해 야당의 특별법도 함께 상정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아직 행안위에 이관되지 않았다”며 “이관되는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고, 여론수렴

절차이다”며 “주민 의견과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 통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구경북행정통합법안의 특례 중에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예외 적용 규정은 사회 적합의를 해치는 것 아니냐”고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전문위원은 “기존 광역단체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부단체장 등을 4명으로 정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통합의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의 부단체장 4명 가운데 국가직을 3명, 지방직을 1명으로 정한데 대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직을 줄이고 지방직을 늘릴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안위는 이 법안들에 대해 오는 9일 입법공청회를 연 뒤, 오는 10일과 11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 넘겨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신정훈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빛

## “전남광주특별시, 첨단산업 핵심축 탈바꿈 한다”

김영록 지사, 대기업 300조 지방투자 계획 발표 환영  
대규모 기업투자 위해 지방 우대 금융지원정책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대기업들의 300조원 지방투자 계획을 환영하며, 전남 광주특별시는 이 중 절반인 15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함께 별도로 신규 300조원 규모 첨단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난 4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함께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삼성, SK, 현대, LG 등 대기업이 3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제게가 과감한 투자 결단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들의 지방투자 300조원 중 최

소한 150조원 이상을 전남·광주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별도로 3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유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AI·에너지 수도 전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특구의 강점을 살려 RE100을 실현할 안정적 친환경 전력, 충분한 용수와 저렴한 산업 부지까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이차전지·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라며 “이러한 최적의 여건을 기반으로 전라남도는 기업과 함께 우리 지역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거점인 전남·광주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를 비롯해 AI, 로봇(미지컬 AI), 수소,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등을 권역별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권역별로 서부권은 재생에너지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조선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항공산업, 반도체 패키징과 화학물반도체 공장을 적극 유치한다.

동부권은 기존 석유화학·철강산업과 연계해 로봇산업 등 피지컬 AI와 반도체 패키징, 수소환원제철,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광주권은 반도체 패키징산업과 함께 광주 민간·군공합 이전부지 100만 평에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헤드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대적인 투자유치가 실현되도록 함을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장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의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기존 3%대 금리를 전남·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은 1%대의 저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도 금융위원회와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겠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지방우대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이번 기업의 지방투자계획은 전남·광주가 통합으로 이루려는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45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 전남·광주 산업을 일어나고 일자리가 넘쳐, 청년이 고향에서 꿈과 미래를 펼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축으로 탈바꿈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전남 관광지·축제 12곳, ‘로컬100’ 선정  
지역 문화관광자원 경쟁력 입증…홍보·마케팅 등 지원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순천 정원위케이션 등 전남도 대표 관광지와 축제 12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기 로컬 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다.

‘로컬 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지자체와 국민 추천으로 접수한 약 1천 개 자원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0선이 확정됐다.

이번 ‘제2기 로컬 100’에는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 △순천 정원위케이션 △담양 담빛예술창고, 시가문화권(소쇄원 일원·한국가사문학관) △고흥 옥섬 △보성 다함대축제 △해남 고산윤선도유적지(연동마을)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여신로드’ △진도 윤림산방, 신비의 바닷길 축제, 토요민속여행이 최종 선정돼 전남 문화관광자원의 전국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문화관광자원에는 공식 현판이 수여되며, 향후 2년간 문제부주관의 다양한 홍보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엔 12곳이 대거 선정된 데는 도 대표축제 육성과 글로벌화 지원, 특화 관광상품 운영, 남도한바퀴 투어코스 연계, 국내외 SNS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해당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인지도와 방문율을 꾸준히 높여온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흥 옥섬

기초생활보장 확대…저소득층 복지 지원  
도, 올해 4823억 규모 8700여가구에 추가 혜택

전남도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419억원 증액된 4823억원을 확보, 8700여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됐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은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확대됐다. 1인 가구 기준은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인상 지원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강화한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

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제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소득자의 질병, 주택파괴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된다. 생계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73만500원에서 78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187만2700원에서 199만4600원으로 인상에 지원된다.

올해 저소득층 지원 제도 개선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급여 향상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 더 촘촘하게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광주시민과 함께 ‘통합특별시’ 미래 설계  
시, 19차례 공청회·17차례 간담회에서 주요 쟁점 점검

광주시가 전남도와 행정통합에 대한 권역별·직능별 시민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36차례 열어 시민과 함께 ‘통합특별시’ 미래를 설계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부터 4일까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를 19차례 열고, 시민·사회단체·전문가·직능별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 구청장, 역대 시의회 의장단 등과 17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지금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각계각층과 폭넓은 소통을 진행했다.

그동안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과 정에서 기존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신중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5개구 자치구 권역별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광주 정체성 약화 우려,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 논의의 속도와 절차, 최대 20조원 규모로 제시된 재정지원 활용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광주시는 통합 이후 광주의 법적 지위가 특별시로 격상돼 권한과 위상이 오히려 확대되며, 기존 광주광역시의 권한과 사무는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한 민주·인권·정의의 광주정신도 제도적으로 계승돼 광주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능별 시민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환경 보전, 산업생태계 확장,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 활용, 광역 교통체계 구축, 주민자치 권한과 재정지원 확대, 돌봄과 공공의료 역할 강화, 청년 일자리와 교육 여건 개선, 체육계 고용과 예산의 안정적 유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별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2월 특별법 통과 전까지 법안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지방상생특위’ 닦아…사회적 대화나서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 ‘지방창업생태계조성특위’도 발족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지난 4일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사회적 확산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역상생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지역상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정치·경제·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민간 협력 기구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가균형성장 과제를 사회적 연대와 공론화를 통해 보완·확산하는 사고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앞으로 간담회·토론회 등 온·오프라인 공론화 활동을 통해 지역 현장의 문제와 정책 성과·한계를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상생과 연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균형성장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제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 변화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만들 수 없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 현장의 문제를 몸으로 겪어온 분들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촉 위원과 회의에서 “지역 간 갈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와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해소되기 어렵다”며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과 생생한 목소리를 제안한다면,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율려 “앞으로 지역상생특별위원회가 지방 사·도위원회와 함께 협력해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는 이날 ‘지방 창업생태계 조성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 관점의 창업정책 아이디어 발굴 △시장제 및 창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부처 간 창업정책 연계·조정방안 검토 등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율려 단순히 창업 기업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과 일자리가 함께 설계되는 ‘머물 수 있는 창업’,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줄 것을 특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